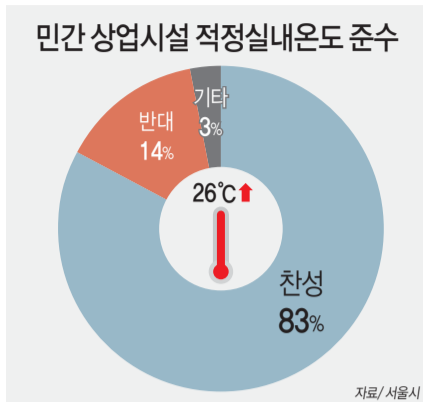


# 시민 83% “민간 건물도 여름철 실내 26℃ 준수해야”

## ‘민주주의 서울’서 찬반조사

**찬성** “극장·카페 갈때 카디건 챙겨 ‘문 열고 에어컨 가동’ 에너지 낭비”

**반대** “피서차 상업시설 방문한다 강압적인 시행엔 부작용 따를 것”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건물에서도 여름철 적정 실내온도를 지켜야 할까. 서울 시민들은 민간 상업시설에서도 에어컨 온도를 26도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 10명 중 8명은 ‘민간 건물에서도 적정 실내온도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권장하는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는 26도 이상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정책 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서 민간 상업시설 적정 실내온도 지키기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물었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투표, 결정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난 2017년부터 운영돼왔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672명 중 561명(83%)이 ‘민간 건물에서도 적정 실내온도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반대는 97명(14%), 기타는 14명(3%)으로 집계됐다.

시민 이모 씨는 “여름철에 카디건을 챙겨서 극장이나 카페에 가는 건 진짜 아닌 것 같다”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안모 씨는 “여름철 명동이나 강남, 홍대 등 상업시설이 모인 지역에 가 보면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 놓고 문을 죄다 열어놓고 있다”며 “그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시원한 바람이 느껴질 정도다.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며 의견을 보였다.

설문에 참여한 윤희수(가명) 씨는 “강압적인 온도 낮추기 정책을 시행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반대 의견으로는 “지역마다 온도가 다 다른데 똑같은 온도로 통일시킨다는 건 상황과 맞지 않다”, “사람들은 집이 더워서 피서차 식당에 간다. 적정온도를 지키면 손님이 줄어들 것이다”, “집안 전기 사용량에 대해 누진제를 부과하기 때문에 더위를 피하려고 상업시설을 찾는 것이다. 시민이 열병에 걸려 죽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 환경을 만들어 달라”, “일하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을 모두 생각해야 한다” 등이 있었다.

한국전력거래소에 의하면 여름철 최대전력 대비 냉방으로 인한 전기 부하는 2004년 20%를 돌파한 이래 2015년 24.5%, 2017년 28.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작년 여름은 11년 기상 관측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

시는 상업시설에서도 적정 실내온도를 지키면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시민들은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를 기존 26도 이상에서 약간 낮춰 자발적 참여 유도하기, 일괄 적용 대신 적정 온도를 지키는 민간 시설에 예외 포인트 지급하기 등 다양한 대안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상업시설 적정 실내온도 준수’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들어봤고, 이를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단계”라며 “시민 여론을 분석해 핵심 키워드 등 의미 있는 것들을 뽑아 소관 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서울 대중교통 어디서나 와이파이망 ‘공짜’

내년 총 7405대 공공와이파이망 버스정류소 2358곳서도 서비스

내년이면 서울의 대중교통 어디에서나 무료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마을버스에 공공와이파이망을 구축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시는 올해 10월까지 마을버스 235개 노선 총 1499대에 공공 와이파이 단말기를 설치한다. 내년까지 서울 시내 버스 6000대,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 1405대에 와이파이망 구축을 완료한다. 현재 서울에서 운행 중인 버스 총 7405대 중 270대(3.6%)에만 공공 와이파이망이 설치돼 있다.

버스정류소에서도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358곳)와 가로변 버스정류소(2000곳)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시는 10만㎡ 이상의 대형 공원(보라매공원, 여의도공원 등) 24곳에 와이파이 단말기 300대를 설치해 공공 와이파이망을 구축한다.

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장애인복지관, 청소년 쉼터를 비롯해 마을공동체와 지역커뮤니티 공간에도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한다. 현재 101개 복지시설에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300개 시설에 공공와이파이

망을 구축한다. 시는 연말까지 공공와이파이 단말기를 기존 1만1666개에서 2만개로 늘릴 예정이다.

김태균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보편적 통신복지 차원에서 대중교통, 공원, 복지시설 중심으로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서비스를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10년간 경기도 땅, 여의도의 18배 커졌다

도, 면적 1만187.8㎢→51.9㎢↑

지난 10년간 경기도 토지가 부천시 면적만큼 늘어났다는 통계가 나왔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적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8년 말 기준 경기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기도 면적은 1만187.8㎢로 2009년 1만135.9㎢보다 51.9㎢가 증가했다. 이는 부천시 전체 면적(53.4㎢)의 97%, 여의도 면적(운중로 제방 안쪽 기준 2.9㎢)의 17.9배에 해당하는 넓이다.

토지 증가 원인은 2010년 연천군 민통선과 DMZ(비무장지대) 일원 미복구 토지 31.8㎢, 서해안 공유수면 매립지와 누락토지 추가등록 20.1㎢ 등이 새롭게 지적공부에 추가됐기 때문이다.

공유수면 매립지는 안산·시흥시 시화발전테크노밸리 사업부지 10.2㎢,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사업부지 4.7㎢,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사업부지 3.1㎢, 지적공부 등록 누락토지 신규등록 2.1㎢ 등이다.

지목별 면적은 임야가 5337㎢

(52.4%)로 가장 많고 논 1천243.6㎢(12.2%), 밭 901.3㎢(8.8%), 대지 577.8㎢(5.7%), 도로 445.4㎢(4.4%), 하천 405㎢(4.0%) 등의 순이었으며 광천지(온천·약수가 용출되는 부지)가 180㎡로 가장 작았다.

지난 10년간 대지·창고·공장용지 등 생활 관련 토지는 643.5㎢에서 842㎢로 198.5㎢, 도로·철도 등 교통기반시설 토지는 378.7㎢에서 468.8㎢로 90.1㎢ 각각 늘어났다.

반면 임야·논밭·과수원 등 녹지와 농경지는 7천882.7㎢에서 7천503.5㎢로 379.1㎢ 줄었다.

시군별 면적은 양평군 877.7㎢(8.6%), 가평군 843.3㎢(8.3%), 포천시 826.7㎢(8.1%) 순으로 넓고 구리시 33.3㎢(0.3%), 과천시 35.9㎢(0.4%), 군포시 36.4㎢(0.4%) 순으로 작았다.

필지 수로는 화성시 48만8118필지(9.9%), 평택시 36만2767필지(7.3%), 용인시 31만9898필지(6.5%) 순으로 많았으며 과천시가 1만6648필지로 가장 적었다. /의정부=김승열 기자 kimsy@

# ‘페이퍼컴퍼니’ 건설수주 근절 경기도, 건설업 종합대책 발표

공사 수주만 노리고 가짜 회사를 설립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건설산업 질서를 해치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를 뿌리 뽑기 위해 경기도가 나섰다.

경기도는 4일 오전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달부터 시행하는 종합대책은 지속단속, 협업단속, 사전단속 등 3가지 방식으로 추진한다.

지속단속은 지난 2월 실시한 시범단속을 두 차례 더 하는 것으로, 단속 대상은 도내 등록 건설업체 사무실이다.

경기도는 건설업체 사무실을 방문해 등록기준(자본금, 사무실, 기술자 수) 적정 여부, 고용보험 가입 여부, 적정 임금 지급 여부 등을 살필 방침이다.

경기도는 상·하반기 두 차례 합동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사전단속은 계약 단계에서 경기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의정부=김승열 기자



2019 대기질 국제포럼 행사 모습. /서울시

# 서울시, 미세먼지 해결 국제기구 추진

서울시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 창립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동북아 4개국, 10개 도시가 참여하는 ‘동아시아맑은공기도시협의체(EACAC, East Asia Clean Air Cities)’의 회원국을 늘리고 기능을 확대해 2020년까지 국제기구로 격상한다는 계획을 4일 밝혔다.

EACAC는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로 심화된 동아시아 지역의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도시 간 협력체다. 현재 서울시, 중국 베이징시, 선전시, 일본 도쿄, 몽골 울란바토르 등 4개국 10개 도시를 비롯해 유엔환경계획, 중국환경과학연구원 등 2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기존 도시협의체는 교육과 조사, 연구에 집중했다. 시는 이를 국제기구로 발전시켜 정례회의를 통해 각 도시의 우수 정책, 기술, 정보를 공유·연구하고 교류협력도 강화한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달 22~23일 열린 ‘2019 대기질 개선 서울 국제포럼’에 참여한 해외도시 관계자들에게 협의체의 국제기구화 계획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도시들에 추진 목표, 프로그램, 향후 계획, 가입방법 등을 소개하는 안내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1년간 참여 신청을 받아 2020년 5월 개최되는 동북아 대기질 개선 서울 국제포럼에서 창립총회를 열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 서울 면목동에 첫 ‘가로주택정비사업’

‘미니 재건축’이라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지역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 5월 30일 열린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44-6번지 일대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 시행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중랑구의 노후 연립주택 2개 동(총 24세대)을 7층짜리 1개 동의 공공주택으로 정비하는 내용이다. 전체 공급세

대 28세대 중 25%인 7세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용적률을 200%에서 232%로 올려받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이번 사례는 지난해 2월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서울에서는 처음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김현정 기자